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 · 필기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제1강 공공조달 개요

정의 · 참여자 · 특성 · 구성체계

공공조달은 왜 민간의 구매와 다른가. 정의와 목적, 누가 참여하는가, 무엇이 특수한가를 먼저 세웁니다. 이 강의 개념이 이후 모든 과목의 언어가 됩니다.

세부항목 4

세세항목 10

확인문제 10문항

강의 50~70분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에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1-1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 목적 / 범위
- 1-2 공공조달 참여자, 이해관계자 — 수요자 / 공급자 / 이해관계자
- 1-3 공공조달의 특성 — 상업적 구매행위 특성 / 조달행위 특성
- 1-4 공공조달의 구성체계 — 조직적 구성체계 / 감독 및 기능적 책임

이 강의의 큰 그림

공공조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는 일"**입니다. 이 문장에 이 과목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세금**이라서 책임이 따르고, **공적 목적**이라서 가격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라서 법령이 촘촘합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도입 질문: **"공공기관이 노트북을 살 때와 여러분이 노트북을 살 때, 무엇이 다를까요?"** 답이 자연스럽게 이 강의의 목차가 됩니다 — 돈의 출처, 목적, 절차, 책임.
- 1과목은 암기 과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가"**를 이해하면 절반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첫 강의에서 그 태도를 심어 주세요.
- 이 강의의 개념(수요기관·조달기관·계약상대자)은 **2·3과목과 실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처음부터 교정해 주세요.

① 공공조달의 정의

세세항목

공공조달의 정의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공공재원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정의를 쪼개서 외우기 — 4요소

- **주체**: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 **대상**: 물품 · 용역 · 공사 — 공공조달의 3대 대상물
- **재원**: 공공재원(예산·기금 등 결국 국민의 세금)
- **방식**: 법령이 정한 절차 — 임의로 할 수 없다

유사 개념	의미	공공조달과의 관계
구매(Purchasing)	필요한 것을 사는 행위	조달의 일부. 조달은 계획·계약·이행·사후관리를 포함
계약(Contract)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조달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
공공구매	공공부문의 구매 활동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나, 정책 맥락(중소기업 공공구매 등)에서 자주 사용

② 공공조달의 목적

세세항목

공공조달의 목적

공공조달의 목적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 목적**이 있고, 그 위에 **정책 목적**이 얹힙니다.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1과목 전체의 열쇠입니다.

층위	목적	구체적으로
기본 목적	필요 물자·서비스의 적기 확보	공공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경제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투명성·공정성 확보	부패 방지, 균등한 참여 기회
정책 목적	산업·경제 정책 실현	중소기업 판로 지원, 기술개발 촉진
	사회·환경 가치 실현	녹색조달,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우선구매

💡 "가장 싼 것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경제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적격심사·종합심사** 같은 장치가 있고, 중소기업·녹색·사회적가치 **우대제도**가 존재합니다. "왜 그런 제도가 있는가"를 묻는 문제는 대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 목적 간 충돌이 곧 제도의 쟁점이다

경제성(싸게)과 정책 목적(중소기업 보호)은 **서로 부딪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제도의 상당 부분은 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제4주요항목(전략적 공공조달) 전체가 하나로 꿰집니다.

③ 공공조달의 범위

세사항목

공공조달의 범위

대상물에 따른 범위 — 물품 · 용역 · 공사

구분	내용	특징
물품	유형의 재화 — 사무기기, 차량, 자재 등	규격 표준화가 쉬움, 목록화(품명·품목) 체계 가 적용
용역	무형의 서비스 — 연구, 정보화, 청소, 경비 등	인력 이 핵심, 성과 측정이 어려움
공사	건설·설치 —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등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며 면허·실적 요건이 엄격

과정에 따른 범위 — 조달은 "사는 순간"만이 아니다



시험에서 "조달의 범위"를 물으면 대상물(물품·용역·공사)과 이 전 주기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구매는 한 시점이지만 조달은 과정입니다.

💡 조달 방식에 따른 범위 — 중앙집중 vs 분산

같은 물품이라도 조달청에 요청해 사는 경우와 수요기관이 직접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제2주요항목의 중앙집중형·분산형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① 공공조달 수요자

세세항목

공공조달 수요자

수요자란 조달대상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쪽입니다. 공공조달에서는 **수요기관**이라 부릅니다.

구분	예	적용 법령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 기관별 계약사무규칙
기타	지방공기업, 각종 공공단체 등	개별 근거 법령

⚠ "수요기관"과 "계약기관"은 다를 수 있다

물건을 쓰는 기관(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계약기관이 됩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조달사업법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② 공공조달 공급자

세세항목

공공조달 공급자

공급자는 조달대상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유형
공급 형태	제조업체(직접 생산) / 공급업체(구매해 공급)
기업 규모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우대제도의 기준
대상물	물품업체 / 용역업체 / 공사업체 (중복 등록 가능)
참여 형태	단독 /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분담이행) / 원수급자-하수급자

💡 공급자의 지위는 단계마다 이름이 바뀐다

조달업체
등록 전·후



입찰참가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③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세세항목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도 공공조달에는 여러 주체가 개입합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조달의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입니다.

이해관계자	역할
조달청	중앙조달 수행,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계약 지원
재정경제부	국가계약 제도 총괄, 계약예규 제정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감사원	조달 집행에 대한 감사
국민·납세자	재원의 원천이자 최종 수혜자 — 투명성 요구의 근거
분쟁조정기구	이의신청·분쟁조정 처리
보증기관·금융기관	각종 보증서 발급, 자금 지원

💡 이해관계자를 왜 묻는가

공공조달이 민간 구매와 다른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간 구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공공조달에는 **돈을 낸 국민과 그것을 감시하는 기구**가 항상 배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의 엄격함과 기록 의무의 근거입니다.

① 상업적 구매행위 특성

세세항목

상업적 구매행위 특성

공공조달도 결국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민간 구매와 공유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위(조달행위 특성)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상업적 성질	내용
대가관계	재화·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 하는 쌍무·유상 계약
경제성 추구	같은 조건이면 더 유리한 가격·품질 을 선택
시장 의존	공급 시장의 경쟁 상황·가격 변동 에 영향을 받음
계약자유 의 기초	사법(私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짐 — 민법이 적용되는 근거
품질·납기 관리	검사·검수, 하자담보 등 민간 거래와 유사한 관리

 이 단원이 5주요항목과 연결된다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도급·위임, 화해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주요항목의 첫 세부항목이 민법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② 공공조달의 조달행위 특성

세세항목

공공조달의 조달행위 특성

이제 **민간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가 이 강의의 핵심이자 최다 출제 지점입니다.

특성	내용	제도적 결과
공공재원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	예산 통제, 감사, 결산
법정 절차성	임의로 상대를 고를 수 없음	경쟁계약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
공개성·투명성	공고·개찰·결과가 공개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공개
공정성	참여 기회의 균등	자격 제한의 최소화, 이해충돌 관리
정책 수단성	구매력을 정책에 활용	우대제도, 구매목표제
책임성	담당자·기관이 결과에 책임	문서주의, 기록 보존
계속성·안정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됨	이행보증, 지체상금, 비상 공급계획

⚠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대비 구도

비교 축	민간 구매	공공조달
상대 선택	자유	경쟁이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
판단 기준	이윤·효율	경제성 + 공익·정책 목적
절차	내부 규정	법령이 규율
공개	비공개가 일반적	공개가 원칙
책임	경영 책임	법적·행정적 책임 + 감사

 발표자 노트 — 15분, 이 강의의 핵심

- "민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두 개의 표로 대비시키는 것이 이 강의의 백미입니다. 판서로 두 열을 그려 놓고 수강생에게 채우게 하면 몰입도가 크게 오릅니다.
- 각 특성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겼는가"를 붙여 주세요. 예: 공공재원 → 감사 / 법정 절차성 → 경쟁 원칙 / 정책 수단성 → 우대제도. 이렇게 연결하면 4·5주요항목이 미리 예고되어 이후 강의가 쉬워집니다.
- 시간이 부족하면 상업적 특성(①)은 빠르게 넘기고 조달행위 특성(②)에 집중하세요.

① 조직적 구성체계

세세항목

조직적 구성체계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제도를 만드는 곳**과 **집행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공조달 조직 구성체계 — 제도 총괄 / 조달 집행 / 공급 / 감독

층위	담당	역할
제도 총괄	재정경제부(국가) · 행정안전부 (지방)	법령·계약예규 제정, 제도 개선
중앙조달	조달청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물품목록 관리
자체조달	각 수요기관	기관이 직접 계약 체결·집행
공급	조달업체	입찰 참가, 계약 이행
감독	감사원·국회 등	적법성·타당성 감사, 통제

② 감독 및 기능적 책임

세세항목

감독 및 기능적 책임

공공조달에서 **책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체	기능적 책임
계약담당공무원	법령에 따른 계약 체결·이행 관리. 재량이 아니라 기속 이 원칙인 부분이 많음
수요기관	수요 산정의 적정성, 규격 결정의 타당성, 검사·검수
조달기관	계약 절차의 적법성, 경쟁성 확보
계약상대자	계약 이행 의무, 하자담보책임. 위반 시 보증금 귀속·제재
감사기구	위법·부당 여부 감사, 시정 요구

💡 책임을 담보하는 세 가지 장치

- **문서주의** — 절차와 판단을 문서로 남긴다. 남기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다.
- **공개** — 공고·결과를 공개해 외부 감시를 받는다.
- **제재** — 위반 시 보증금 귀속,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진다.

⚠️ 공급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합니다.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이며, 제6주요항목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1강에서 미리 예고해 두면 이후 강의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한 문장으로

☑ 공공조달이란

공공부문이 물품·용역·공사를 공공재원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전 과정의 활동.

기억할 프레임

4요소

주체 · 대상 · 자원 · 방식

3대 대상물

물품 · 용역 · 공사

기본+정책

목적은 이중 구조

수요기관 ≠ 계약기관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이 계약기관

경쟁이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

문서·공개·제재

책임을 담보하는 3장치

☑ 이것만은 반드시

- 조달은 구매의 상위 개념이다 —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
- 목적은 기본(적기확보·경제성·투명공정) + 정책(산업·사회·환경)의 이중 구조다.
- 가장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그래서 우대제도와 심사제도가 있다.
-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 민간과의 결정적 차이는 공공재원 · 법정 절차 · 공개 · 정책 수단성 · 책임성이다.
- 제도 총괄(재경부·행안부)과 집행(조달청·수요기관)은 다른 층위다.

 제1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0문항

Q1. 공공조달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다.

물품·용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답 ③ — 공공조달의 재원은 **공공재원**(예산·기금 등)입니다. 재원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감사·통제·투명성 요구가 따릅니다.

Q2. 공공조달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저가 구매가 유일한 목적이다.

적기확보·경제성·투명공정의 기본 목적 위에 산업·사회·환경 정책 목적이 얹힌다.

정책 목적은 공공조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명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정답 ② — 목적은 **이중 구조**입니다. 경제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이며, 그래서 우대제도와 각종 심사제도가 존재합니다.

Q3. 조달과 구매의 관계로 옳은 것은?

조달과 구매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구매가 조달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조달은 계약 체결 시점만을 의미한다.

조달은 계획·계약·이행·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답 ④ — 구매는 한 시점, 조달은 과정입니다. "조달의 범위"를 묻는 문제는 대상물과 함께 이 전 주기를 확인합니다.

Q4.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달청이 계약기관이 되며, 수요기관과 계약기관이 분리된다.

수요기관이 여전히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 물건을 쓰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조달사업법 영역에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Q5. 공공조달이 민간 구매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법정 절차성 — 임의로 상대를 고를 수 없다

공개성 — 공고와 결과가 공개된다

대가관계 — 재화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정책 수단성 — 구매력을 정책 실현에 활용한다

정답 ③ — 대가관계는 민간 거래와 공유하는 상업적 성질입니다. 나머지 셋이 공공조달 고유의 조달행위 특성입니다.

Q6. 공공계약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계약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공공계약이 사법(私法)상 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 민법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상대자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도급·위임, 화해 등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Q7. 국가계약의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는?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정답 ④ — **국가계약은 재정경제부,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합니다. 조달청은 제도 총괄이 아니라 **중앙조달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Q8. 공공조달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납세자는 재원의 원천으로서 투명성 요구의 근거가 된다.

이해관계자는 수요기관과 공급자로 한정된다.

감사원은 공공조달과 무관한 기관이다.

보증기관은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 민간 구매와 달리 공공조달에는 **돈을 낸 국민과 감시 기구**가 항상 배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의 엄격함과 기록 의무의 근거입니다.

Q9. 공공조달에서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로 묶인 것은?

비공개 · 재량 · 협의

구두 합의 · 신속성 · 관행

문서주의 · 공개 · 제재

자율 규제 · 내부 지침 · 포상

정답 ③ — 절차와 판단을 **문서로 남기고**, 결과를 **공개**하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Q10. 공공조달 대상물의 특성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 — 규격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목록화 체계가 적용된다

용역 — 자재비 비중이 절대적이며 성과 측정이 쉽다

공사 —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며 면허·실적 요건이 엄격하다

물품·용역·공사는 요건을 갖추면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 ② — 용역은 **인력이 핵심**이며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이고, 무형이라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 필기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 제1강 공공조달 개요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를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입니다.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강의 및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